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지반대 운동에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동지애를 보내며, 이렇게 발표할 시간을 내주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외국군 주둔에 따른 환경문제는 기지 반대 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작은 분야입니다. 그러나 외국군 철수가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녹색연합의 판단입니다. 더더욱 러시아, 중국이라는 군사대국, 한국과 북한의 분단현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동북아에서 미군의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 국가의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군 철수 이전에 동북아의 평화 공존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무엇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모색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일본,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이 미국의 일방적인 의도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시아·태평양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에 근거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아시아·태평양 기지반대라는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첫 걸음을 놓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1. 주한미군 환경 감시 운동의 역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행태는 한마디로 점령군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것은 비단 한국에서만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점령군으로서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다양하며, 그 처벌이 한국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점령군이 한국의 법을 알아서 준수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환경운동 단체로서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집중하였으며, 1996년부터 주한미군 환경문제를 다루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환경문제는 2000년 7월 1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을 계기로 큰 전환을 맞는다. 주한미군 영안실에서 서울시민의 젓줄인 한강에 독극물 포름알데히드를 무단으로 방류한 사건은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한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 국민들에게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하는 행위를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2001년 1월 SOFA 합의의사록에 환경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불평등하다고 일컬어졌던 한·미 SOFA를 미흡하나마 개정하게 된다.

한강독극물 방류 사건이후 한국에서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건의 발생비율은 대단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1990~1999)에는 한해 평균 1.8건 정도로 나타나다 2000년 이후에는 한해 평균 7건으로 거의 4배 이상 증가하였다.¹⁾ 이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건이 급격히 증가된 것이 아니라, 미군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사로 그동안 감춰져왔던 환경오염이 드러난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한국 국민들이 가지는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 시각은 이처럼 2000 년 이후 더욱 높아졌다. 그리고 2002 년 2 명의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 죽는 사고로 촉발한 미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자주권 문제는 ‘훈련 안전조치 합의서’와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에 관한 합의서’를 이끌어내며, 반환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이 주한미군에게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합의서 체결 당시, 명확한 오염 정화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는 2006 년 현실이 되었다.

2. 반환미군기지 협상 과정

미군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도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평택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고, 59 개의 기지를 2011 년까지 반환할 예정이다.

기지반환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은 2005 년 6 월부터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5.6 월~9 월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오염치유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SOFA 규정상 구체적인 치유수준과 방법이 명확치 않은 현실에서 양국간 이견 노출

- 한국 측 : 우리나라 환경기준에 맞게 치유
- 미국 측 :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이 없어 치유 불필요
- ※ KISE : Known, Imminent &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2005.9.28(제 4 차 SP)

- 한국 측 : 미국 측 제안 8 개항은 KISE 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환경조사 결과 나타난 오염을 치유대상으로 하지 않아 불수용
- 미국 측 : KISE + 8 개항(지하유류저장탱크,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제안
- ※ SPI : ROK-US Security Policy Initiative(한 . 미 안보정책구상회의)

2005.12.6(제 5 차 SPI)

- 한국 측 : 미국 측 제안 8 개항을 포함한 적정 치유수준 협의제안. 특히, KISE 분석결과와 한.미 공동 환경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치유수준협의 제안
- 미국 측 : KISE 외의 추가적인 협의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 측 제안에 반대

2006.1.30.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제안

- 제안내용 : KISE+8 개항+바이오슬러핑을 통한 부유기름 6 개월간 제거(5 개기지 한정)

2006.2.14(제 6 차 SPI)

- 한국 측 : 미측 제안으로는 근원적인 오염치유가 곤란함을 지적하고,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유류와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으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
- 미국 측 : 라포트 제안이 최종. 최선이며, 미측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보해주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

2006.3.21(제 7 차 SPI)

- 한국 측 : 2 가지 방식(오염지하수를 바이오슬러핑방식으로 처리/오염토양을 굴착 후 지하수 처리방식)을 2-3 개월간 시범 적용하는 방안 제시
- 미국 측 : 한국 측 제안은 미국 측 제안 범위 밖의 추가제안으로 수용불가하며, 미국 측 제안의 이행방안에 대한 결정사항을 서면전달 예정

2006.5.25(제 8 차 SPI)

- 한국 측 : 토양만 오염된 기지(10 개소)는 미국 측 제안대로 치유 후 반환, 토양 및 지하수 오염기지(16 개소)는 ‘나’ 기준 치유 후 반환
- 미국 측 : 4 월 7 일자 서한에 담긴 내용에 변함이 없으며, 한국 측 대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2006.7.13-14(제 9 차 SPI)

- 미국 측이 8 개항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통보한 15 개 기지를 SOFA 절차에 따라 반환 받기로 합의

3. 반환미군기지 협상에 대한 환경단체 대응과 한계

환경운동 진영을 포함한 한국 시민사회는 반환미군기지 협상에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신이 저지른 환경오염을 정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국회의원과 함께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국민의 79.1%가 ‘주한미군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의 시민사회인사 100 인은 지난 4 월,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해 미국 정부에 직접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군은 100 여 개국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해외 주둔군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환경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 내 환경문제 못지않게 해외에 관심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자리였다.

6 월에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 등 거의 모든 자료를 미군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환경부를 상대로 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환경부가 제시했던 미군과 체결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를 근거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으며 환경오염조사 결과는 외교사항이 아니므로 국내법상 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9 월에는 전국의 371 명 청구인은 정부 내 독립기구인 감사원에 이번 협상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협상 과정의 불투명함은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를 불신하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처럼 한국 시민사회는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소극적이며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한 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협상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을 3 차례 면담하는 등 정부에 국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면담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 시민사회가 한계에 부딪힌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주한미군 아니, 미 국방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에 대해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기지를 반환하며 환경오염을 정화한다는 것은 전 세계 미군이 주둔한 모든 국가에 선례로 남는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이는 미군이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녹색연합 등 한국 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국제 사회의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성을 피부 깊숙이 느낀다. 다행히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주한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과 비에케스, 파나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군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통이 한국을 포함해서 미군이 주둔하는 각 나라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한국 시민사회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을 일구어 낸 세계 시민사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국제 시민사회가 외국군이 주둔함에 있어서 발생시키는 환경문제에 대해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외국군이 정화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국제협약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1) 이 수치들은 녹색연합이 언론보도와 시민제보, 자체 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다. 따라서 모든 주한미군환경오염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